

##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역할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유병규

국내 경제가 살아날 듯 하면서도 시원스러운 회복 양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1/4분기 성장률은 예상치를 밑도는 2.7%로 급락하였고, 4월 산업활동 역시 올 들어 가장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러다가 국내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제시할 하반기 경제 운영 계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의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는 뾰족한 묘안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 같다. 워낙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이 저마다 한계를 지니고 있는 까닭이다. 우선 우리 경제는 경기 하강과 함께 국가 채무 증가, 빈부 격차 심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같은 문제점들이 복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대외 여건 변화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기의 상승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국제 고금리, 글로벌 달러화 약세, 고유가와 원자재가 상승, 위엔화 절상, 북핵 위기와 같은 대외 악재들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지금의 국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정부의 전통적인 거시 정책 수단들로는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 효과가 미약하고 그나마 그 효과가 이중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금리 측면을 보면 그동안 저금리 정책을 써 왔지만 본래 의도했던 투자 증가는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금리차 역전을 우려해 더 이상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재정 측면 역시 그동안 매년 추경 편성과 조기 재정 지출 등을 통해 내수 진작을 시도해 보았지만 그 효과는 역시 신통치 않다. 더욱이 최근에 들어 국가 채무가 급증하여 적자 재정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환율 부문 역시 내외수 경기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입장에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화 약세를 과도하게 조장하면, 물가 상승 등으로 내수 부진을 부추기게 되고 환율 조작국으로도 의심을 받는다. 또 환율 변동 폭이 날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원화 가치의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경제 성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면 계층간이나 지역간 격차 문제가 걸리고, 형평성에 눈길을 돌리다 보면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다고 난리가 난다. 사실 정부는 현재 무엇에 정책 추진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지도 난감하고, 마땅한 정책 수단을 찾기도 어려운 정책 추진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셈이다. 예전처럼 정부가 막강한 힘을 지니고 모든 국가 자원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정부의 갑갑함은 더 하리라 생각된다. 갈수록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선 정부가 우리 경제의 모든 짐을 지고 가야 한다는 과도한 강박 관념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우리 경제의 대부분이 민간 부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에도 시중에는 46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떠돌고 있고, 기업에는 66조 원에 달하는 시재금이 존재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동원 여력도 떨어지고 효과도 불분명한 정부 정책 수단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번 하반기 경제 운영 계획에서는 발상의 전환을 하여, 민간 경제 부문이 지니고 있는 자원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데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를 바란다. 늘 나오는 식상한 정책 과제들을 나열하기보다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을 최대한 촉진하는 한편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이 실물 부문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출자, 공장 설립, 금융 시장 등과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보다 화끈하게 제시했으면 한다. 반기업 정서를 정부 내부에서부터 완전 해소하여 기업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정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오직 시장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명실상부한 민간 주도의 창의로운 경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 경제에 넘쳐나는 물적·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길이요, 한국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다.